

건설소식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강릉에 고효율 에너지 네트워크 구축

관계기업MOU... 2013년까지
1,800억 투입키로

국 내에서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에 선정된 강원 강릉지역에
2013년까지 1,800억원이 투자돼
'고효율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이 구
축된다.

김진선 강원도지사, 최명희 강릉시
장, (주)케이디파워 김임배 대표, 한국
전기안전공사 임인배 사장, 한국남
부발전(주) 남호기 사장, 이나루티앤
티(주) 배희숙 대표 등 4개 기업과 서
울대학교 공학연구소 조보형 소장
등은 이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
결식을 개최했다.

양해각서에는 한국남부발전이
30M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단
지를 조성하고, 케이디파워가 LED
조명 생산공장 건립 및 고효율에너
지 기술연구 R&D센터 설치, 전기자
동차 충전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이나루티앤
티, 서울대학교 공학연구소는 전력
IT 기술을 지원하는 등 2013년까지
1,80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 녹색시범도
시에 고효율 에너지 네트워크 기술
이 도입될 경우 30% 정도 에너지 절

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재생 에너지, 직류배전 빌딩, IT기
술의 국내외 표준화를 선점할 수 있
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케이디파워는 이번 MOU를 계기
로 강릉과학단지 내에 LED조명 생
산공장을 설립, 올해부터 양산체제
에 들어갈 계획이며 추가로 인근에 4
만2900㎡ 규모의 부지를 마련해
LED조명 공장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이 강릉지역을
방문했을 때 전격 제안해 추진하게
된 국내 최초 국가시범사업이다.

정부는 단계별로 2016년까지 녹색
성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명품도시로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의무화

내년6월...설계시공업 자격 신설,
민간사업자도 시행 가능

내년 6월부터 물 재이용 시설
설치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
계시공업 자격증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물 재이
용 촉진법'이 담긴 수도법 개정안을
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내년 6
월부터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의무

대상은 전국 모든 공공청사 및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빗물이용시설은 전국 모든 공공청사에 설치해야 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관광단지, 산업단지, 택지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는 중수도 이용시설을 필수 설치해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자에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권한도 전면 개방됐다. 공공하수도관리청(시장 및 군수) 외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하고 싶은 경우 환경부 장관의 인가만 받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시 공업 자격증도 예고대로 신설됐다. 자격증을 갖추지 못한 업체는 재이용 설치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셈이다.

다만 기존 종합건설업체 중 산업환경설비업 자격을 갖춘 건설사와 일부 전문건설업체 중 환경부가 정한 기본 요건을 충족시킨 업종은 별도 자격증 취득 없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환경부 물산업지원팀 조희송 과장은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계 시공업은 국토해양부의 건설산업기본법과는 다른 테두리에 있는 건설업”이라며 “하폐수처리업만 담당하는 전문 건설업체 육성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체 중 대체 자격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 및 신설 자격요건은 7~8월 사이 결정된다.

그러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사업

이 민간에게 개방되었다 하더라도 요금 결정권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일임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한 요금만 받을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할 경우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이번 수도법 개정안에는 상수도 상류 공장입지제한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고, 물에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 또는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이 위생안전기준에 맞는지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U-물순환시스템’ 개발 박차

건기연 “도시 물자원 관리·이용 극대화”

한 국건설기술연구원은 도시의 건강성과 쾌적성을 높이고, 생태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요소인 도시 물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위해 새로운 개념의 U-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건설환경연구실에서 개발중인 U-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요소기술은 △광역중수도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도시 물순환시스템 실용화기술 △도

시용수 및 오염물질 통합관리기술 △다기능 생태녹지 조성을 위한 빗물관리시스템 △인공계와 자연계 순환을 포함해 정보를 수집, 조회하고 관리하는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은 하수 및 우수를 대체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중수의 고도처리 기술 및 광역중수도 시스템 실용화 기술개발, 물순환 모니터링 시스템 및 물순환 건전성 향상 요소기술 개발 등을 포함하며 도시 내 물순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자 및 일반시민에게 물 관련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도시용수 및 오염물질 통합관리기술은 중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및 상하수도 등 도시용수의 이용단계별 용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도시 용수 수요량 절감, 도시 전체의 용수이용 건전화율 향상 및 도시용수의 안정적 확보체계를 확립하게 된다.

또 도시 점·비점 오염물질 통합모니터링 및 실질적 유출저감을 위한 유역관리기술 개발 및 도시용수 통합관리 평가시스템, 도시 오염물질 유출 평가시스템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기능 생태녹지 조성을 위한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에서는 빗물의 증발산, 침투, 저류, 오염물질흡착 및 자정기능 등을 가지는 다기능 생태녹지 조성기술을 개발 중이다.

도시유역 및 단위개발사업에 적합한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 및 공간 적용기술 개발, 다기능 생태녹지 조성에 의한 Green Infra 구축 및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 실용화 기술 개발을 포함하고 있다.

불법체류외국인 고용 '주의보'

정부, 합동 단속... 적발땐 범칙금도 부과

정부가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할 계획인 만큼 건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국민의 일자리 잠식과 외국인 관련 범죄 유발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노동부 등 정부합동으로 강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안전 확보를 겸한 것이라고 밝혀 단속강도가 어느 때보다 심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현장 등에서 고용외국인 불법체류여부 파악 등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건설현장 등에 대한 단속에서 근로자 체류의 불법성만을 기준으로 단속을 했지만, 이번 노동부 등과의 합동단속에서는 불법체류자 뿐만 아니라 노동부가 발급

한 건설업 취업인정증명서를 보유하지 않은 동포근로자도 불법고용으로 적발하게 돼 각별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이번에 단속된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없이 강제퇴거 조치만 하는 기존과 달리 강제퇴거와 함께 별도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불법고용으로 단속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즉시 외국인 재고용을 허용하던 방침을 바꿔 최대 3년간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키로 했다.

한편 법무부는 단속과는 별도로 오는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는 처벌을 면제하고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출국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기간동안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의 자진출국에 협조한 사업주에게는 범칙금을 면제하고 내국인 또는 사업장변경 외국인력(단, 고용허가 발급조건을 충족해야 함)을 신속히 대체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규제를 하지 않을 계획이다.

사업주가 불법고용 중인 외국인과 함께 출국당일 항공권을 소지하고 공항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를 방문(외국인 동반 불필요)해 불법고용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제주도에 국내 첫 지열발전소 생긴다

동서발전이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휴스콘건설과 손잡고 제주도에 국내 첫 지열발전소 건립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동서발전과 제주도는 지난 5월 11일 제주도청에서 도내 지열에너지 기술개발과 지열발전소 건설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열발전은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비해 기상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24시간 동안 전기 생산이 가능해 최근 기저부하용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지열발전소 개발에는 우리나라와 같은 비화산지대에서도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방식인 EGS(Enhanced Geothermal System) 지열발전 방식이 도입된다.

EGS는 우리나라의 지질구조와 지열환경에 맞는 심부지열 발전시스템으로 비화산지대에서 4,000~5,000m를 시추해 외부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지열에너지 저장공간을 만들고 그 곳에 물을 주입해 200℃로 가열된 물을 발전과 난방열 공급에 이용한 후 다시 저장공간으로 물을 순환시키는 친환경적인 발전방식이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지열은 지구 내부의 엄청난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방식으로 전력생산과 동시에 냉난

방·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신재생에너지로서 향후 경쟁력 있는 친환경 에너지"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기술개발을 통해 오는 2020년까지 20MW 이상의 기저부하 전력을 지역발전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Carbon Free Island’ 실현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의 중심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실가스 관리시스템’ 구축지침 발간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방법론'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책자는 환경 선진국인 일본의 기업 사례를 풍부하게 담았다. 또 인천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제 시범 적용한 사례도 실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이번 책자는 온실가스 감축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책자문의는 02-6050-3812

LH, 저가심사서류 원본대조 의무화

LH가 최저가낙찰제 공사입찰 저가심의를 제출하는 증빙서류의 원본 대조를 의무화했다. 지난 5월 1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현재 입찰이 진행중인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부터 건설사들의 저가사유 제출서류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에서는 공사비 절감사유서를 제출하고 절감사유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재를 설계에 반영된 금액보다 싸게 구입해 공사비를 절감하겠다고 제안하면, 최근 1년간 제안한 금액으로 자재를 구매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한다.

LH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하기 위해 향후 저가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건설사가 원본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미호천1교 건설공사 △진주평거(3)3블럭 3공구 △부산정관A-22블럭 6공구 △함안칠원 1공구 △김포한강Aa-5블럭 6공구 △김포한강Aa-5블럭 7공구 등 현재 입찰이 공고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입찰부터 적용된다.

한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화에 따

라 향후 세금계산서 원본대조나 진위여부 논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주기관이 국세청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석면관리정보 시스템 구축·오픈

서울시는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시민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석면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석면관리정보시스템(asbestos.seoul.go.kr)을 구축·오픈했다고 지난 6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지역별로 대규모 철거현장 등에 대한 석면해체 일정 및 정보는 기관·부서별 홈페이지에서 제한적으로 공개해 왔으나, 시민들이 한눈에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전국 지자체로서는 처음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이 시스템에서는 석면의 정의와 유해성, 서울시의 석면 정책과 석면사용 규제 내역, 석면해체 시 제거 지침과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과 석면피해구제법 등의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1년까지 의료·문화·복지·체육시설 및 업무용 건물 1124곳의 석면 사용실태를 조사해 석면지도를 만들 계획이다. ●